

인터뷰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주력할 터”

— 충남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과 어우러지는 복지 정책” —

가난과 부도의 위험을 딛고 일어난 오뎅이 인생. 충남의 우석건설을 중견 기업으로 일으켜 세운 박해상 대표를 표상하는 데 안성맞춤인 표현이다. 그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호텔리어, 고물상, 표고버섯 농사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이후 신용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충남과 대전에서 자수성가한 건설인이 되었다. IMF 사태 때에는 연대 보증으로 인해 100억원이라는 빚을 떠안게 되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끝까지 경영을 포기하지 않았을 정도로 소명의식도 강하다. 빚은 15년에 걸쳐 모두 갚았다. 박해상 대표는 현재 충남 건설업계로 수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 건설업을 특유의 리더십으로 회생시켜 달라는 충남 회원사들의 간절함을 받아들인 것. 그는 경제가 회복하려면 건설경기부터 살아나야 하며, 건설경기가 살아나려면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지난달 23일 취임 6개월을 맞이한 박해상 회장을 만나 건설 현안과 과제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신임 회장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건설경기의 침체로 지역 건설업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어 감회와 의지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금의 건설업계는 공공 발주 물량의 감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전임 회장님의 잔여 임기를 거쳐 올 초 만장일치 추대에 의해 제23대 도회장직을 맡게 돼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저는 도회장으로서 지역 건설업계의 이익 대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건설 물량 확대를 위해 도내에서 발주되는 대형 공사들에 있어 최대한 분할 발주를 유도하고, 실적 제한을 최대한 완화토록 하여 지역 업체들이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한편,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들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그동안 건설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8개월여의 전임 회장 잔여 임기를 거쳐 지난 6월 말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

해 오신 사항은 무엇이며, 어떠한 성과를 거두셨는지요?

최근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하천공사의 실행률이 1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행률이 110%를 넘는다는 것은 직접공사비가 100억원인 공사를 완공하는 데 건설업체가 11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윤은 고사하고 10% 이상을 더 들여야 완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기준과 대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반건설업체는 물론 하도급사, 자재업체 등 수많은 협력업체의 부실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발주관서 기관장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업계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을 호소하며 다방면으로 뛰었고, 직접 회원사를 찾아다니면서 업계의 고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본회 최삼규 회장님을 도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최근 국토부 공생발전위원회로부터 실적공사비 산정 기준과 표준품셈 및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등에 관한 제도 개선 방침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소 미진했던 부분들은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노력하여 채워 나갈 생각입니다.

인터뷰

올 1월에는 충남도로부터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오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내 건설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된 데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된 것은 저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도내 회원님들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전임 회장님의 잔여 임기를 맡아 나름대로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최저가낙찰제 적용 확대를 막기 위해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법안 시행 유보에 노력하였으며, 충남 지역 건설 단체간 만남과 협의를 통해 다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 및 부당하고 불합리한 입찰제도 개선과 건설공사 원가 삭감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지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건설경기는 어떠한지요?

세종시 건설사업이 그동안 목말랐던 일감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리라는 희망을 갖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대규모 터키 공사와 최저가낙찰제 대상으로 발주되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물량 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건설업체는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및 시공 물량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업체들이 생존 존립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도내 지역 제한 공사 발주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지난해 대비 계약 건수는 4.4%, 계약 금액은 3,8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줄었습니다. 특히, 낙찰 받은 건설업체는 전체 업체 수 대비 55%가량밖에 되지 않아 공공공사를 1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45%나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예산이 급감되면서 입찰 자체가 많지 않아 지역 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도내 건축착공면적이 큰 폭으로 줄었고(8월 107.7% → 9월 -19.9%), 미분양 주택 수도 증가(8월 6,007호 → 9월 6,208호)하는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지역 건설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 건설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 물량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SOC 등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지방의 주택 및 건축 사업 등 민간 건설 수요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수도권 대형 업체들의 수주 독점을 막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확보를 위해 입·낙찰과정에서 지역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지방 경제에서 커다

란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 업체들의 잔치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연장 또는 공종이 분할 가능한 공구의 경우 최대한 분할해 적격 심사 입찰 대상으로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며, 100억원 미만의 지역 제한 입찰 대상 공사도 최대한 늘려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업체들의 수주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도내 주요 발주관서에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공도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제 입찰 대상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업체들의 참여 비율을 제도적으로 일정 이상 보장하여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할 것입니다. 물론, 건설업계도 당연히 저가 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기보다는 자사에 맞는 수주 전략을 수립할 때입니다.

정치권을 위시해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복지 논쟁이 한창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하여 건설과 복지 논쟁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둔 요즘 복지 자체가 최대 화두가 되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더 폭넓은 복지 정책을 제시하느냐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최고의 복지 정책은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업 취업자의 절반 정도는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대부분 우

리 사회의 취약 계층인 서민과 빈곤층입니다. 건설 투자가 축소되면 하도급, 자재, 장비업자 등 건설 연관 산업도 침체되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유발지수는 2.10 정도라고 합니다. 건설업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210억원의 생산이 이뤄진다는 뜻으로, 이는 일반 소비업종인 도소매, 금융·보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취업유발효과도 10억원당 17명으로 제조업보다 크며,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78만명으로 국내 전체 취업자 2,500만명의 7.1%를 차지할 만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건설산업을 폄하하면서 SOC 확충 등 건설 투자를 낭비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특히 복지 위주의 정책에 밀려 SOC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투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녹색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고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등 수자원 분야에도 여전히 투자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항만·산업단지 등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역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신성장 동력 확충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용 창출이 수반되는 생산적 복지 창출을 위해서도 SOC 투자는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 경제 성장과 어우러진 복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글 : 이형우 편집장